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7월 24일(화) 브리핑 시작 이후</h2>		
배 포 일	2018. 7. 24 / (총 4매)			
보육정책과	과 장	권 병 기	전 화	044-202-3540
	담 당 자	송 명 준		044-202-3541
보육기반과	과 장	김 우 중		044-202-3580
	담 당 자	임 세 희 박 춘 서		044-202-3581 044-202-3587

‘잠자는 아이 확인장치(Sleeping Child Check)’ 연말까지 도입

- 「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」 국무회의(7.24) 보고 -
- 원스트라이크 아웃제, 중대안전사고까지 확대 추진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,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「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」을 마련하여 국무회의(7.24)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.

- 이번 보고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
□ 먼저,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·확인하도록,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여 시행한다.

○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

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.

- 따라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,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.

○ 이에 따라, 우선 차량 내부에 “잠자는 아이 확인장치(Sleeping Child Check)”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.

- 나아가,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“안심 등·하원 서비스”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그리고,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·제도를 정비한다.

○ 먼저,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·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,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.

- 더불어,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.

□ 다음으로,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.

○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,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.

-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

제재 수준이 낮고, 아동학대 발생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은 미미하여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.

- 이에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“원스트라이크 아웃제(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)”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.
-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.
- 아울러,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.

□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.

-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,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.
- 장기간 미종사한 보육교사의 경우, 자격 취득 후 공백으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 필요한 전문성과 관련 소양을 갖추기 어려웠다.
- 이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미종사 기간별 의무 교육 과정을 개설*하고,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.

* 예시) 미종사 기간 1~2년: 12시간, 2~3년: 16시간, 3년 이상: 20시간의 의무교육 시간 부과

-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.
 -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,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이 통상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경향이 있었다.
 - 하지만,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있다.
 - 이에,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하여 안전·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.
 - 또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,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 -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박능후 장관은 “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”고 전했다.
 - 더불어 “이번 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”며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.